



서울특별시

▶ 소규모 돼지·닭고기 취급업소, 원산지 위반률 높아

서울시는 최근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 1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7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지난 3월 10일 밝혔다.

위반 업소 중 9개 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6개 업소는 원산지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았다.

또 여러 국가 원산지를 나열해 표시한 거짓(혼동) 표시 업소와 원산지 국가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수입산으로만 표시한 업소가 각각 1곳씩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소규모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률 17%는 한우전문음식점, 대형한정식음식점 등의 평균 위반률 5.4%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 1곳을 고발 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업소 등은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 적정규모 미달농가 지원 제한 방침

경기도가 축산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실상의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해 영세 축산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가축의 면적

성 저하, 차단방역의 구조적 결함 등에 따른 가축 전염병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도내 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적정 사육두수 등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소, 돼지 등 우제류와 닭, 오리 등 조류 농가이다.

도는 또 ▲사육관리 ▲방역현황 ▲축산 관련 교육 ▲외국인 노동자 고용 여부 ▲축사 환경 등 5개 지표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축산농가 종합평가 기준을 마련, 축산농가에 대한 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축 사육 적정면적 등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축사 현대화 시설 자금 지원, 농지구입자금 이자보전 등 각종 축산사업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비 회수 등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도의 축산업 평가관리 정책이 사실상의 축산업 허가제로 받아들여지면서 규모가 영세한 축산농가들은 앞으로 운영난이 불가피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김포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K씨는 “가득이나 구제역과 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이 많은데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축산 관계자는 “적정 사육면적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농가까지 혜택을 주게 되면 거꾸로 열심히 기준을 준수해 온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며 “도내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도 평가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 중구, 춘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인천광역시 중구는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27일까지 2011년 춘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한다고 지난 3월 29일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의 대상은 소 260두 소탄저·기저병, 돼지 100두 일본뇌염·돼지 열병·유행성 설사병, 닭 1만6,000수 뉴캐슬병과 개 2,800두 광견병 등으로 접종비용은 무료다.

강원도

▶ 철원군, '우리맛닭' 분양

철원군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우리맛닭'을 분양한다.

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15년에 걸쳐 복원한 재래닭 실용계 병아리 분양신청을 오는 4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지난 3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실용계는 '우리맛닭'이란 상표로 시장에 내놓은 고품질 토종닭으로 우리고유의 순계품종을 이용해 개발됐다. '우리맛닭'은 콜라겐 함량이 높아 쫄깃쫄깃한 육질과 구수한 고유의 향을 지니고 있으며, 성장이 개선되어 경제성이 높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분양가격은 초생추 경우 마리당 1,000원, 백신 접종 완료 5주령 중병아리는 마리당 3,800원이다. 사육기간에 따라 삼계용은 50일, 백숙용은

100일 정도 사육하면 이용할 수 있다.

희망을 원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팀으로 전화(033-450-5070)하면 된다.

충청남도

▶ 부여, 전업축산인들 축산과 신설 건의

구제역, AI 등의 가축질병 발생을 조기 차단, 청정군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부여 지역 내 전업축산인들이 부여군에 축산과 신설을 건의하고 나섰다.

현재 부여군 내 축산인은 3,000여 명으로 한우 3만 여두, 돼지 10만 여두, 닭 380만수 등을 사육하며 주 농가 소득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부여축협(조합장 김우영)은 지난 3월 24일 축산인 대의원 및 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부여군에 축산과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축산인을 비롯한 농업인 1만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3월 11일 부여군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우영 부여축협 조합장은 "충남도 내 7개 시·군에서 단독 또는 복합적인 축산과를 운영, 축산인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지역 축산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부여군에도 축산 농가를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축산과 신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시 축산과 신설의 필요성을 군의회 의원들과 논의했으나 일부의원들의 예산 및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 AI 청정충북 지켜 '1천억' 효과

시가 발생하지 않은 안전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청정충북'이 얻은 경제적 효과가 1천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28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AI 비발생으로 얻은 충북의 경제적 효과는 농가 직접소득 효과가 829억원, 방역 및 살처분 비용 절약에 따른 간접소득이 약 270억원에 이른다.

충북도내 가금류 사육현황은 닭 4천643 농가에 1천641만 마리, 오리 499농가 165만5천 마리로, 농가당 평균 약 1천6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

지난해 겨울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6개 시·도 24개 시·군에서 5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630여만 마리를 매몰하는 등 시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동안, 충북도에서는 구제역과 달리 여전히 비발생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지난 2008년에 이어 올해에도 제주도에 78만 마리에 해당하는 가금육을 독과점으로 공급한 바 있다.

제주도 가금육 독과점 공급은 예년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시는 철새에 의해 2차 전염으로 진단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은 철새 도래지가 적다는 자연적인 이점이 있다.

충북도는 겨울 철새들의 이동기간인 4월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연장하여 차단방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충주시, 축·수산 경쟁력 강화 102억 투입

충주시가 지역 축·수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축·수산사업에 102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3월 16일 시에 따르면 축산물 수입개방 대응과 사료값 인상 및 구제역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수산 농가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의 축산·수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사환경 개선 등을 통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해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문별로는 한우, 젓소, 돼지, 닭, 기타가축 등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24억3,600만원을 투입하며, 가축방역사업 10억7,4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사업 22억2,500만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9억5,2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6억9,4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4월 구제역이 발생한 신니면 지역의 가축 입식자금 19억6,800만원을 지원하며, 내수면 어업활성화사업에 8억6,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영동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추진

영동군은 주거 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영동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 및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 200m이내에서의 축사건축이 불가능하고, 돼지, 개, 닭, 오리 사육시설은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또 상수도 시설로부터 100m이내 지역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지역 등도 축사 신축이 제한된다.

군은 4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5월 중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군의회에 상정한 뒤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 춘계 가축예방주사 실시

대구시는 '춘계 가축예방주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3월 20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예방접종은 총 7종 90만9000두로 소탄저·기종저 4200두, 돼지열병·단독훈합백신 2만6500두, 광견병 1만2600두, 닭 뉴캐슬병 80만수, 꿀벌 기생충구제 6만6000군 등이다.

닭 뉴캐슬병은 사육농가에 직접 약품이 배부된다.

예방주사 실시기간은 오는 4월 10일까지다.

기타 문의는 시청 농산유통과(053-803-3466) 및 각 구·군 관련부서로 하면 된다.

경상남도

▶ 양산, AI 이동제한 조치 해제

양산시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가축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양산시는 지역 축산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아 지난 2월 25일 내려졌던 가축 이동 제한 조치를 3월 29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상북면과 하북면 산란계 집산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산에서는 지난 2월 양산시 동면 양계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토종닭 100여 마리를 매몰 처리했다.

전라남도

▶ 사료 내 항생제 사용 검사 강화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는 오는 7월부터 가축 사료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지난 3월 30일 밝혔다.

사업소는 사료 내 항생제 사용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림수산물부고시(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가 지난해 12월 개정된데 따라 항생물질과 합성항균제 등 동물용 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고시를 통해 2005년 44종의 항생제 중 28종의 사료 내 첨가금지를 시작으로 2009년엔 7종을 추가로 금지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구충제 등을 제외한 9종의 항생제를 추가로 금지시켰다.

사업소는 농가에서 질병 발생이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축산물 항생제 잔류검사 외에도 항생제 내성균 검사,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 남원시, 허브닭 연구로 브랜드 만든다

남원시가 허브를 이용한 토종닭 브랜드를 개발해 시험연구 닭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 8일에 열린 이번 검사에는 가슴살과 다리살을 대상으로 다즙성과 연도, 향미 등 전체 기호도를 조사했다.

이날 실시된 연구에 사용된 닭은 지난 2009년부터 1년간의 시험연구결과로 로즈마리를 사료에 0.1%, 0.5%, 1%를 첨가해 사육한 결과물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나타낸 문제점을 보완해 허브 시험연구 닭의 성공적 정착에 주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김제시, 가금류 AI 예찰 검사 실시

김제시는 AI 발생위험 사전예방 및 유입여부 조기검색에 따른 AI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4월 11일까지 도내 종오리, 육용오리 사육농장 전체 및 재래시장 유통 가금류에 대한 AI 예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AI 상시방역체계 운용에 따라 실시하는 2011년도 1분기 일제 예찰검사로 도내 종오리 농장 13농가를 포함하여 20수 이상 오리 사육농가 전체 및 재래시장 유통 가금류 18개소에 대해 AI 항원 및 항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오리 사육농장에 대한 AI 일제예찰은 연 4회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도내에서 올 겨울 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 1월에 오리사육 농장 112개소 360건에 대한 추가 검사결과 검사농가 전체가 AI 음성으로 판정된 바 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오리농장 뿐만 아니라 종계, 산란계 및 토종닭 등 닭 사육농장에 대해서도 AI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AI 재발방지 및 국내 유입 시 조기에 색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소독 및 차단방역과 함께 검사시로 채취 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환절기 맞아 어르신들 위한 삼계탕 제공



군산시 나운2동자치센터 직원과 주민자치위원 임원 등은 지난 3월 30일 나운 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기원했다.

봄철 환절기를 맞아 나른해지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나운2동 직원 및 자치위원회 20여명은 생활이 어려운 관내 저소득 어르신 400여명에게 (주)하림으로부터 기탁받은 닭 400마리로 직접 삼계탕을 대접했다.

나운 주공 4차 아파트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 세대가 다수 거주하고 있어 무료급식소에서 나운2동 통장단, 부녀회 등 자원봉사자들이 아름다운 손길을 모아 매일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무료급식소에서 수년간 제공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 제10회 아·태 가금학회 학술대회 유치



2014년 개최 예정인 제10회 아시아-태평양 가금학회 국제 학술대회

(APPC, Asia Pacific Poultry Congress) 제주 유치가 확정됐다.

지난 3월 28일 제주도와 제주컨벤션뷰로에 따르면 제주컨벤션뷰로와 한국가금학회 유치단이 지난 3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11년 아·태 가금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공동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이사회 투표에서 경쟁국인 싱가포르를 제치고 2014년 개최지로 제주가 결정됐다.

제주컨벤션뷰로는 행사기간 중 이사회 임원뿐만 아니라 참가자 700명 모두를 대상으로 2014년 행사유치에 올인하면서 아름다운 자연, 무비자 입국의 편리성, 우수한 컨벤션 인프라와 숙박시설, 올레길 등을 적극적 홍보해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냈다.

닭, 오리, 칠면조 등 가금류에 관한 학술연구,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의 장이 될 2014년 아·태 가금학회 국제학술대회 제주 유치로 시와 구제역 청정 지역으로서의 제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특히 세계의 가금관련 학자들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약, 사료 분야의 다국적 기업에게 제주를 알리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14년 행사 참가자가 1,000명(외국인 700, 내국인 300)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파급효과도 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4월 1일부터 가금류 등 축산물 반입 허용

제주도는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해 실시한 반·출입 금지조치를 4월 1일자로 일부 해제한다고 지난 3월 31일 밝혔다.

마지막 시 발생일로부터 21일이 지난 시·도산 가금류(병아리·종란) 및 가금산물도 반입키로 했다. 가금 성축은 닭 종계만 반입 허용하되 해당 종계장에 대한 시 검사와 방역관의 현장 입회·확인 후 반입할 계획이다.

반출의 경우, 소는 도축장 출하축, 돼지와 가금류는 모두 허용한다.

제주도는 “도내 축산물 등 수급상황 등 반입금지 조치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반출입을 허용키로 했다”며 “반입금지 조치로 그동안 수급이 어려웠던 가금육 등 일부 품목의 수급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입해제〉

- 우제류 : 생축을 제외한 구제역 관련 반입금지 품목
 - 쇠고기, 정액, 등록비료, 전남·북에서 생산된 건조 등 조사료
- 가금류 : 마지막 시 발생일로부터 21일이 지난 시·도에서 생산된 가금류 성축(종계제외)을 제외한 반입금지 품목
 - 초생축, 가금육, 계란, 종계장에서 생산된 종계(오리는 제외)

〈반출해제〉

- 모든 가축은 제주항에서 육지부 운송차량으로 환적
- 반출대상 : 【축우】 도축장 출하축, 【돼지·가금】 모두 허용

▶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도축장·도계장 출하 가축(소·돼지·닭 등)을 대상으로 항생물질 잔류여부 검사를 확대해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지난 3월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봄철 황사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최근 심한 일교차에 따른 농장 내 환기 불량으로 가축의 생체리듬이 깨져 농장 내 가축질병 치료 및 사양관리 차원에서 동물용 의약품 사용이 빈번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른 것이다.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는 도축장·도계장 출하가축을 무작위로 시료 채취하거나 긴급도살, 화농, 주사자국 등 잔류위반 의심축의 시료를 채취해 1차 검사로 항생제 잔류유무 판정, 양성 판정 시 2차로 정밀기기 분석을 통해 항생물질 종류와 기준치 초과 여부 등을 정밀 검사한다.

잔류위반 농가는 검사 완료일부터 6개월 동안 출하가축에 대해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3회 연속 음성 판정 시에는 잔류위반 농가 지정이 해제된다.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결과는 2009년 12농가 27건, 2010년 5농가 8건, 올해는 지금까지 잔류위반 발생 사례가 없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일부 양축 농가에서

만성 소모성 질병 발생 시 수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지 않고 자의적인 의약품 사용으로 항생제 다제내성균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한편 동물위생시험소는 앞으로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질병발생 방지, 동물용의약품 안전수칙 준수 및 선택적인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잔류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제주시는 농어가 및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관리능력 배양 및 생산기술 혁신을 통한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월 29일 밝혔다.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원예·특작농가 5천㎡, 축산농가 돼지 1천두, 닭 2만수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농어가 및 공동마케팅조직, 마을단위 영농조합 법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신청받은 56개 농가 및 법인 가운데 45개 경영체를 선정, 6억 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수 22농가, 원예특작 8농가, 축산 7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7개소, 조직경영체에 대해서는 회계, 재무관리, 병해충방제기술 배양, 토양관리,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영농경영법을 경영지도사, 시설원예기술사, 식물보호기사 등이 소속된 전문컨설팅 업체에서 1년간 컨설팅을 하게 된다. 